



# 판교밸리의 자랑 레티튜 뉴욕증시 상장

올여름 폭염으로 전력수급 비상, 유럽 탄소세 도입 … 소형모듈원전 주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 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이 시대과 제로 요구되고 있다.

판교밸리의 자랑 레티튜드 뉴욕 증시 상장

성남의 위치한 레티튜드사 뉴욕 증시 상장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산업발전이 지속되는 데다, 이상기 후로 여대급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 기 때문이다. 전력공급의 양대축이 안전성과 친환경성으로 요약되는 이유다.

▶관련기사 13면

이러한 문제는 2021년 여름 들어 더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15일 전력사용량이 여름 들어 최 고로 기록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15일 “오후 4~5시 쯤 최대 전력수요가 8890만㎾로 드(kW)에 달해 전력예비율이 9.8% (871만㎾)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전력 공급예비율은 10.1% 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 폭염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7월 넷째주와 8월 둘째주에 전력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간 전력예비율은 4.0~4.8%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비상이다.

정부가 영구폐쇄했던 석탄발전소 까지 재가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건설 완료후 규제 기관 심사를 마친 원전(산한울 1호 기)은 1년 2개월 만에 운영허가를 내줬지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3월에야 가동될 전망이다.

설비용량이 커 전력난 대비에 효과적인 원전은 총 24기 중 8기가 멈춰 있다. 7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이고, 1기는 화재로 인한 고장 정비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날 EU 집행위는 세계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정책(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구조상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에 악



‘탄소배출 감축 계획’ 발표하는 EU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라이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재료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구조상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기업에 악

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sub>2</sub>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 이후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유럽위원회(EC)는 2023년 본격 시행할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유럽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천연가스는 EU 택소노미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망향이 잡힌 것으로 알

## 박근혜, 구치소 문 나설까? … ‘대선 폭탄급 변수’ 촉각

정치권 ‘광복절 사면설’ 이어 ‘제헌절 형집행정지설’ 출렁 박측 “금시초문 … 여권이 조치 안하면서 여론장사만” 불만 박 석방 ‘야권 분열과 윤석열 저격’ 효과 … “대선 전 단행”

제헌절(17일)을 앞두고 정치권에 서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집행정지 사유(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또는 성탄절 사면설이 제기됐다. 야권 인사는 15일 “사면은 형집행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데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

당이 커서 (여권이) 형집행정지를

택할 가능성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는 재수감이 가능하다. 검사 권한이다.

제헌절 형집행정지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르겠다.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박근혜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통원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실제 저쪽(여권)에서 형집행 정지든 사면이든 알려온 게 없다”며 “(여권이) 아무 조치도 안하면서 괜히 (여론) 장사만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추측이 끊이지 않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는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설이 끝이지 않는 건 △노령과 건강 악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 수감(15일 현재 1568일째)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임박(내년 5월

9일) 스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국민 통합을 앞세워 ‘박근혜 석방’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 정치권이 ‘박근혜 석방’에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문을 나서면 보수야권은 친박과 비박, TK와 비TK, 노령층과 비노령층으로 분열 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과 TK, 노령층이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굳이 국 정농단 수사를 비판하지 않더라도

총장에게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야권 고위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서 ‘수사가 잘못됐다.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윤전총장은 물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여권이 대선 전에는 ‘박근혜 석방’을 단행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여권이 야권을 분열시킬 이간계로 ‘박근혜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전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측의 석방 준비 움직임이 포착된다. 친박인사는 “줄 소하면 곧바로 입원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중심’ 의견은 31.1%로 3.2%p 감소했

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44.1%로 지난 분기와 유사했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의견은 4.5%p 늘었다.

이는 30대 연령층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줄고(11.4% 감소),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대폭(21.2% 증가) 늘었기 때문이다. 30대 연령층은 기업정책과 세금정책 모두 긍정적인 여론(중소기업 중심, ‘서민에 유리하다’)이 우세한 유일한 계층이다. 다른 연령층은 모두 부정적인 여론(‘대기업 중심’, ‘부유층에 유리하다’)이 우세하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늘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줄었다.

국민 58% “재벌개혁, 경제성장에 도움”(-5)

경제개혁연구소는 14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정기(분기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분기(4월)에 비해 다소 나빠졌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은

39.8%로 3.5%p 증가했다. ‘중소기업

부정적 평가(O, F학점)가 18.8%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산 관리 관점에서 보면 중국시장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은 최근 수년 간 치솟았다. 부분적인 이유는 수조달러 가치의 글로벌자산이 추종하는 주요 주식·채권지수에 위안화자산이 속속 편입되면서다.

가장 최근 사례로 FTSE러셀 세계국제지수는 올해 3월 중국국채를 글로벌 채권시장에 포함시키겠다고 확정했다. 노무라증권은 약 13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자금이 중국국채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의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통’을 통한 자본유입으로 현재 외국인의 중국국채 종보 유액은 5780억달러(3조7000억위안)로 늘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14일 기준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중국본토 주식 2280억달러 이상을 보유중이다. 이는 기타 외국인투자 프로그램을 제외한 액수다. 중국 채권·주식 보유액을 합하면 모두 8060억달러로, 1년 전 5700억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1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은광 기자 powerftp@naeil.com



## 탄소와 싸우는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 금융지원, KDB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

### KDB탄소스프레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탄소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운용규모 5조원 이내 금리우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평가기준 등에 따라 최대 연1.0%, 한도 소진 시까지)